VISION 10

환경 · 노동 · 나눔공동체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 근로, 나눔의 어울림

35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청정하늘, 깨끗한 땅, 맑은 물'

- 국토 대청소(Clean & Green Korea) 사업추진
-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 수돗물 실시간 수질 관리시스템
-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 대기오염 예보 · 경보제 강화
-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36 노사상생 · 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보호'

-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 노 · 사 · 민 · 정협의체 운영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37 나눔의 공동체, 조성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쁨, 베푸는 사회'

-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 'Happy Together' 카드 발급과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 기부문화 활성화 적극 추진
-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 지역에서 하는 취약계층 보호

VISION 10

환경 · 노동 · 나눔공동체

목표 35

상쾌한 자연, 가꾸겠습니다.

'청정하늘, 깨끗한 땅, 맑은 물'

국토 대청소(Clean & Green Korea) 사업추진 / 아름다운 산하를 내손으로

전국의 강, 호수, 저수지, 댐, 연안, 계곡, 군사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로 국토환경이 크게 열악합니다.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과 미흡한 관리체계로 생태환경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은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로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녹지공간 감소와 저효율적인 국토관리에 전면적인 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름다운 국토조성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하천과 바다 쓰레기를 정화하는 '국토대청소운동'을 추진하고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친환경적 수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토대청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동원되는 인력과 기관, 방식, 비용조달 등의 과제에 곧 착수하겠습니다.

■ 자연경관 및 전통 · 역사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미를 창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역사경관림 및 도시 숲 등의 확대를 통한 숲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 업그레이드와 농촌마을 가꾸기의 병행 추진으로 특색있는 국토공간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도시 경관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도시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온정감은 물론이고 외국 관광 등의 수요와도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겠습니다. 도시 이외에도 해안경관 보전, 수중쓰레기 정화사업,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한 워터프런트(Water Front)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 행정안전부의 경관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의 하천정비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22 western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 조성

남북한 연계 한반도 생태벨트를 조성하고 DMZ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식목사업을 필두로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 2010년까지 남북 실무협의 및 남북공동조사로 생태계조사를 실시하되 북한과의 합의 이전에는 남측 지역에 평화공원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북한산림 황폐화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연안 및 내륙 광역 생태 축·조성사업 추진, 훼손된 하천·도랑·실개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진국형 취수 및 정수체계 도입

국민 70%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1~2% 정도만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실정입니다. 정수기술의 발달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공급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은 높은 수준이나 농어촌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러한 식음용수 문제를 새 정부에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의 개발 및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 선진국형 취수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공급을 위한 간접취수, 취수원 이전, 식수 전용댐 등 활용 가능한 방안을 지역별로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취수체계를 개편하고 이와 연계하여 권역별 수도사업자를 대형화하겠습니다. 각 지방생활권 등을 고려해 최적 범위로 수도사업자를 통합한 뒤 수도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도사업자의 성격도 다원화하겠습니다.

-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 소규모 식수 전용 저수지개발, 하수관거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의 식수 수준을 반드시 개선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 324 western

수돗물 실시간 수질 관리시스템

수돗물의 실시간 수질 및 수량 관리기술을 저가로 국산화하는 대책과 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이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잉여 정수량을 부족지역에 연계·공급하는 등 급수체계를 조정하여 중복·과잉 투자부문을 해소하고 급수체계조정 및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수도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잉여 정수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사업자 대형화 등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수돗물 처리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씻고, 물을 사 먹는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수돗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누수 및 오수유입 방지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더욱 개량하여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병입, 판매하는 등 물 공급루트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감독과 규제 / 국민건강을 위한 환경보건정책

유해물질 증가로 인한 아토피, 천식 등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아토피유병률 급증현상은 새 학교, 새 보육시설에서 성인보다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생활용품과 장난감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관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학물질 생산·유통량 및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화학물질 평가관리업무 추진의 중복·분산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및 신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의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각종 증후군을 저감시키는 기술과 방법을 찾겠습니다.

- 「건축법」의 개정으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사용을 규제, 감독하고 환경위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규제의 정도를 합리화하여 비용과 효과간의 균형을 취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26 western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 어린이를 행복하게

국민복지 증대 차원에서 저비용·고치유율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각 지역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퇴치센터'로 지정해 발병실태 및 치유방법을 중점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치유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진국 수준으로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생활용품과 식품 중에 사용되는 유해물질과 첨가물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아토피 관련 항목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관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기준강화를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연구센터'의 지정 확대와 보건소 등을 '아토피·천식퇴치센터'로 지정하며,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3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겠습니다.

- 선진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 국내 화학물질 시험기관 육성 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 등에 벤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벤젠, 납 등 6종 취급제한물질을 유해물질로 확대·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경보제 강화 / 호흡기 질환자를 위해서

현재 대기오염의 예보와 경보체계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우선 공지하기 위해서 예보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경보시스템을 통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를 강화하고,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및 진단을 개선하겠습니다.

- 황사 및 오존농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노인과 기관 지계통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존 경보에 추가하여 황사에 대한 경보체계를 추가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28 wes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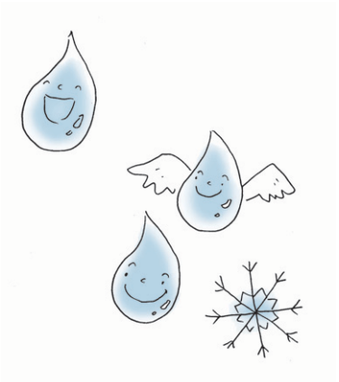
청정개발체제의 구축 / 에너지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논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큰 국가입니다. 향후 급격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진국과의 경쟁이 대단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가 클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는 주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대통령실의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저감 신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내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강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 및 수요 측면의 각종 지원, 세제혜택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감축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화력발전, 철강, 화학산업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청정석탄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총전력 생산량 대비 5%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열, 폐자원(폐가스, 폐목재 등)의 연료화 및 재이용도 지원하겠습니다.

-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탄소자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정개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VISION 10

환경·노동·
나눔공동체

목표 36

노사상생 · 산업안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보호'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 생산성 향상

기존 분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협의모델을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노사분쟁의 해결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사관계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고용창출 및 노사관계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창출 실적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고용 관련 성과를 평가하고 공표하겠습니다.

■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원칙 확립을 위해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적 분쟁 조정과정에서 사법권에 의존한 정부의 개입으로 노사갈등이 노정갈등으로 비화돼 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현재 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사전 교섭지도·조정·분규수습 등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되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32 western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향상(산업재해예방체제 강화) / 생명과 신체의 보호

근로조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건강 위해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생활의 안전 보호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근로자에게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줄이는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위험 요인이 큰 문제부터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낙하사고를 줄이고 기계에 신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등의 위험을 우선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고 사망자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방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원리가 합리적으로 적용돼 시장기제에 의한 위험 수준이 감소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서도 생명과 보건상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일방적인 안전감독보다는 자체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고용보험과 재훈련

영세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비정규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으로 일정기간 사회안전망 내에 포함시키고 향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것은 생계여건이 여의치 않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훈련 부담과 훈련의 질을 고려해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집중하는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실직자 등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수당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묶는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34 western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 / 합리적 노무관리 정착 지원

노동부의 근로감독, 노사지원과 산업안전지도 등이 일선 사업장을 감독한다는 차원보다는 합리적 노무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서비스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분야별로 중복되어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근로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문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겠습니다. 사후 고객만족도 등 시행성과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작업환경 관리대상 기업의 기준을 확대하고, 일상적 안전관리체계로 산업안전의 책임 분배와 소재를 명확히 해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규제의 영역은 확대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기존 분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사 협의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노사분쟁 해결에서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 지역별 노·사·민·정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노사관계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노·사·민·정협의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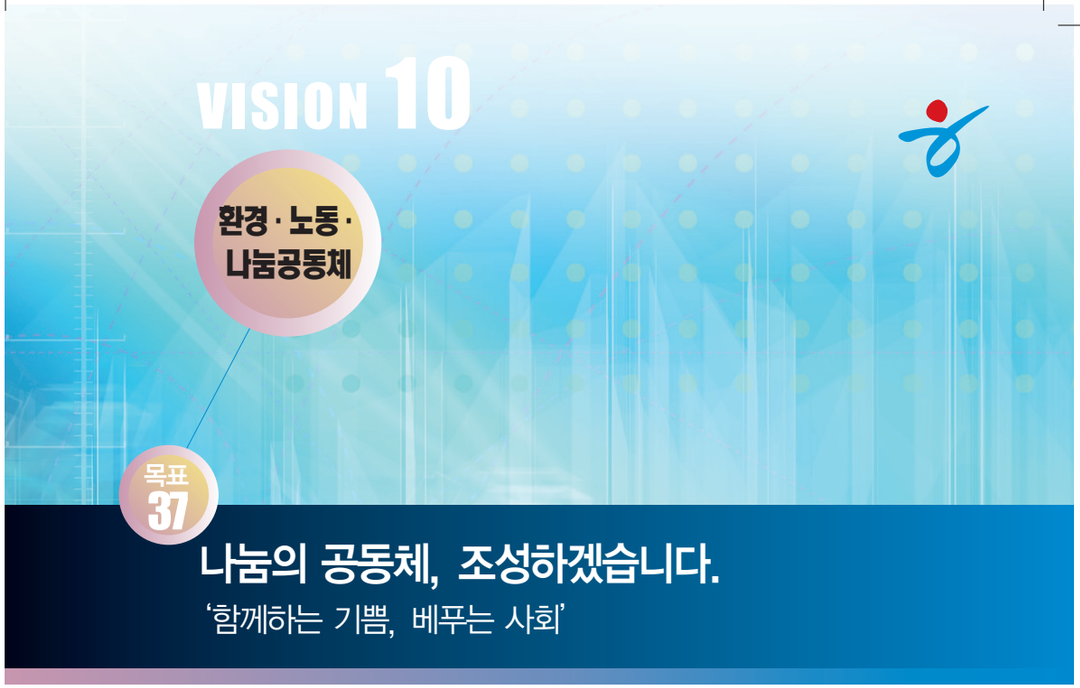
-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 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노사분쟁 해결 기능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겠습니다.

- 노사관계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지역별 물가수준과 생활수준, 경제적 여건의 격차로 지역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은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지역별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임금기준을 설정,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권익증대를 위한 노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명나눔(헌혈), 행복나눔(기부), 사랑나눔(자원봉사)의 생활화

복지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수혜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펼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명 나눔(헌혈, 장기 기증 등), 행복 나눔(기부문화 등), 사랑 나눔(자원봉사 등)운동 등 3대 나눔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보건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 나눔운동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38 western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나 기증에 동의한 사람은 추후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자신의 자원봉사시간 만큼 노후에 돌려받거나 주위에 기증할 수 있는 '자원봉사저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장기 기증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에 사고시 자신의 장기를 기부할 것인가를 사전에 표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Happy Together' 카드 발급과 'Happy Together' 인증서 부여 / 사랑나눔운동

기부문화는 선진국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손꼽히는 사회적 실천운동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을 생활화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은 우리사회를 한층 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 신용카드, 핸드폰, 항공사 등 각종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기부할 수 있는 'Happy Together' 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카드소지자를 우대하는 식당, 극장, 편의점 등에는 'Happy Together' 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나눔운동을 사회전반에 확산 하겠습니다.

■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소비생활에서 부가적으로 생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각종 마일리지 제도를 기부로 연결해 전 사회적인 기부문화를 일으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사 1나눔 운동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340 western

기부문화 활성화 적극 추진

우리 사회에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하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육원, 장애인 시설, 양로원 등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재해지역이나 불우시설 등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우대해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부금을 사용하는 공익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수령 규모, 사용 내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이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인 책임의식 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 시는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다양한 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작은 손길이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선진문화의식의 정착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자신의 자원봉사시간 만큼 노후에 돌려받거나 주위에 기증할 수 있는 '자원봉사저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장기기증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나 기증에 동의한 사람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필요로 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FQ)10한 나라 본 책(318~343) 2008.3.29 5:25 AM 페이지 342 western

지역에서 하는 취약계층 보호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이 고용불안 및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온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용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고용 지원을 특화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의 3貧 현상(돈·시간·프로그램)을 타개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한 경우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를 시행하고, 훈련연장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주말·야간 강좌를 개설·확대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 비정규직 특화과정을 개설·확대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중 근로 의욕이 높은 지원자를 위한 '취업패키지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법」(가칭)을 제정('08년 중)하고, 시범사업('09년 3,000명)을 거쳐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07년 55개 → '12년 1,000개 기업)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용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고용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고용개발 특별지역 지원제도) 지역 고용여건이 악화되거나 지역 노사단체·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개발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공모형 지원·매칭펀드형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개발의 재정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평가 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 연장, 추가 지원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지역에 맞는 고용·인적자원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역량·투자·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